

#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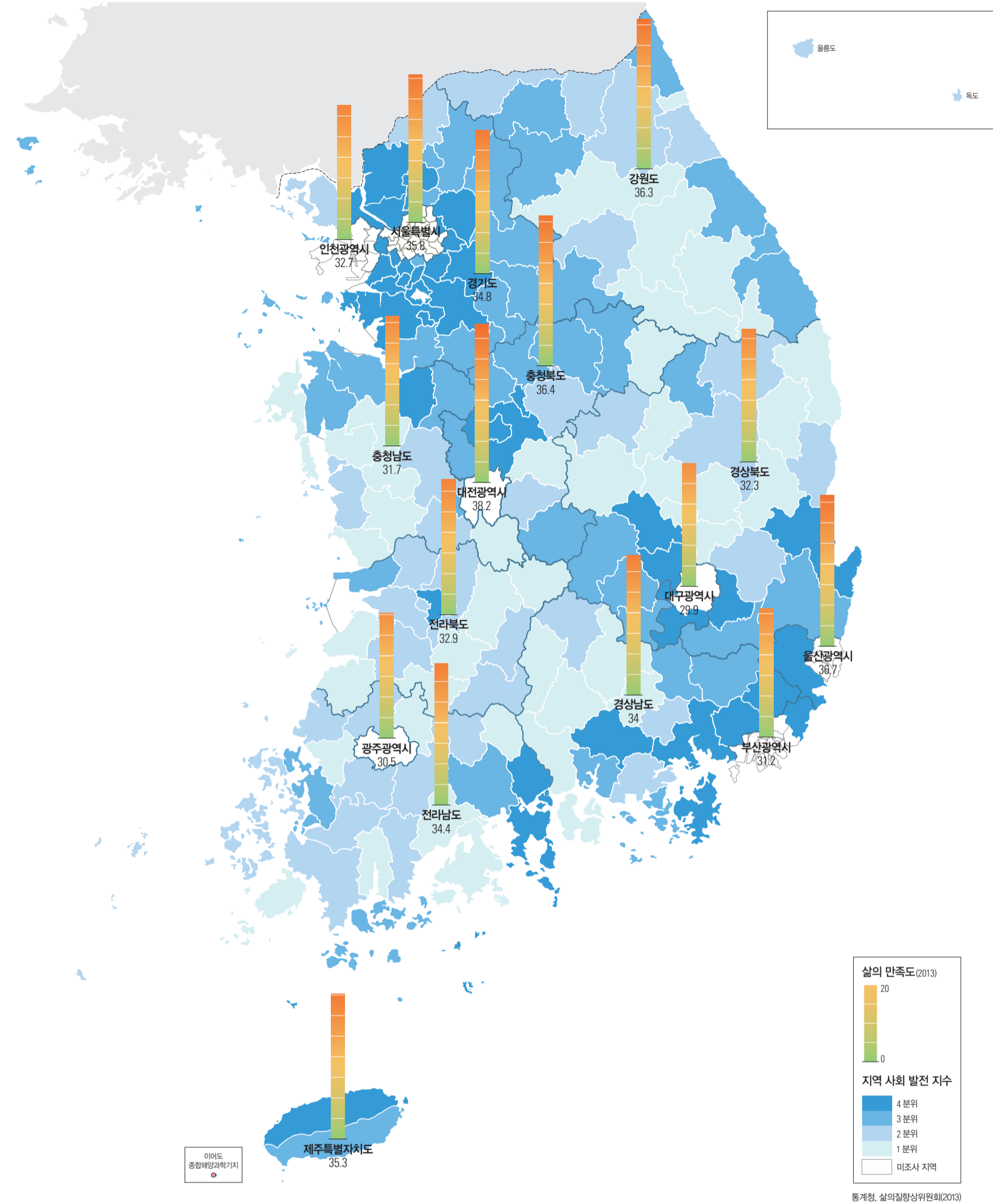
행복은 일상에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이고 삶의 지향이다. 그러나 그 행복의 구체적인 형태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산업화 초기 양적 성장 지향의 개발 시대를 지나 질적 성장 지향의 관리 시대에 접어들어, 경제적·객관적 지표 위주의 행복 수준 평가가 사회적·주관적 지표를 포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표 자체에 대한 다수의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정부, 지방자

치단체, 학계, 기업체 등으로부터의 다양한 연구 결과가 미디어에 빈번히 소개되고 있다. 일반에게 공개되는 경제 지표와 사회적 지표 간 가장 큰 차이는, 전자가 개인의 행복을 지표화하는 데 금전이나 효율 등 단일 척도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 후자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척도를 사용한다는 데 있다. 이는 단순히 평가의 기준이 단일한 것이나 다면적인 것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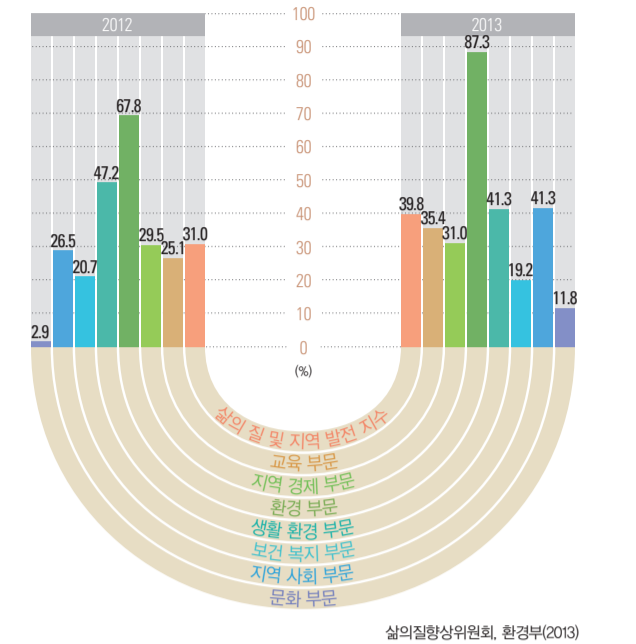
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행복 수준의 해석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단일 개념에 의한 것이나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다. '삶의 질'은 금전이나 효율 등 단일 지표에 의한 행복 수준의 평가가 갖는 문제를 극복하고, 한 사회나 한 개인의 행복한 정도를 표현하는 데 보다 사실에 가까운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한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삶의 질을 평가하고 그 의

미를 공유하려는 공식적 기관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있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해마다 측정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 자치 단체별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여러 민간 기관에서도 그들의 관심과 기준에 의해 삶의 질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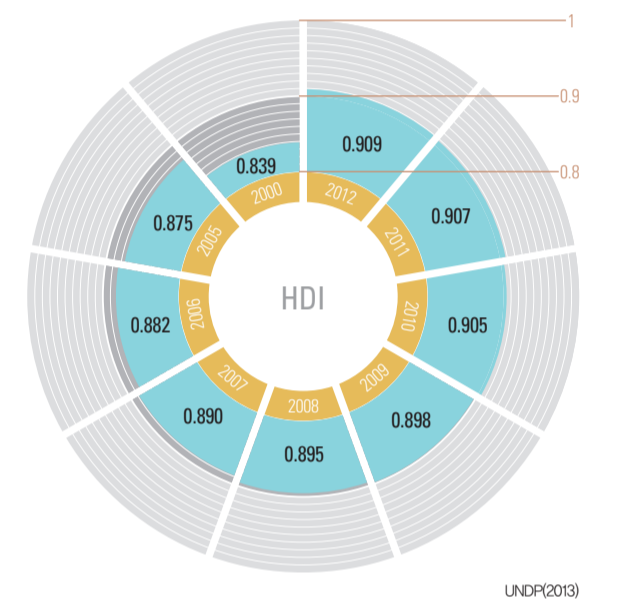
## 삶의 질 지수 행복 지수(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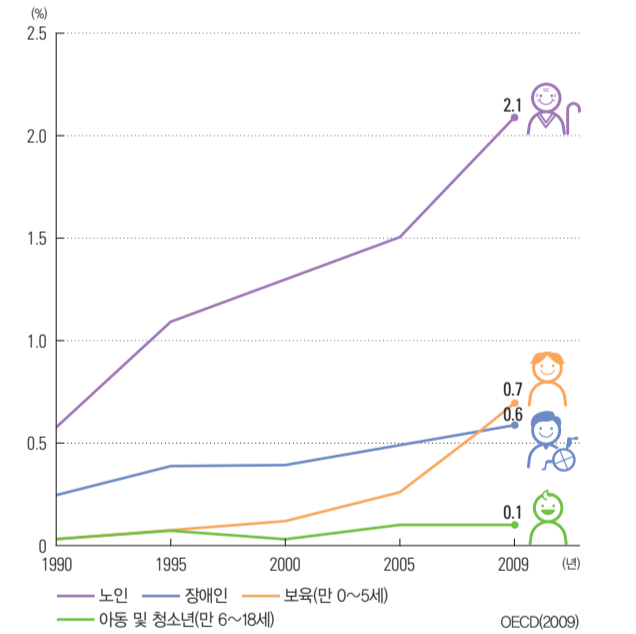
## 삶의 질 부문별 지표 전국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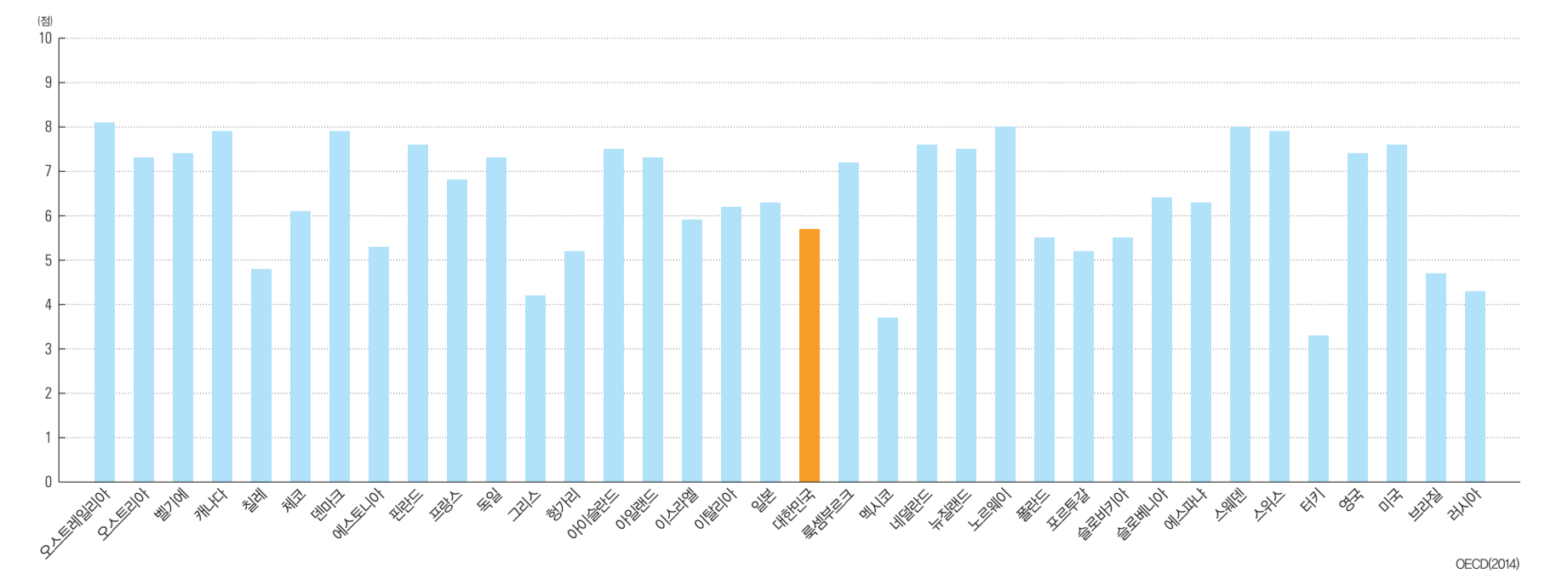
## 인간 개발 지수(HDI)



## 분야별 GDP 대비 복지 예산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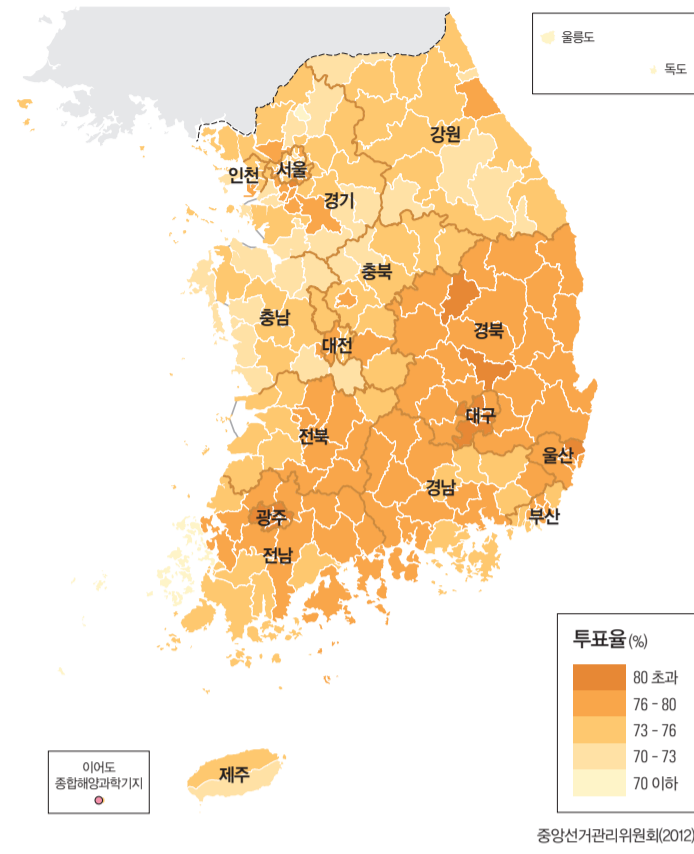
## 국가별 삶의 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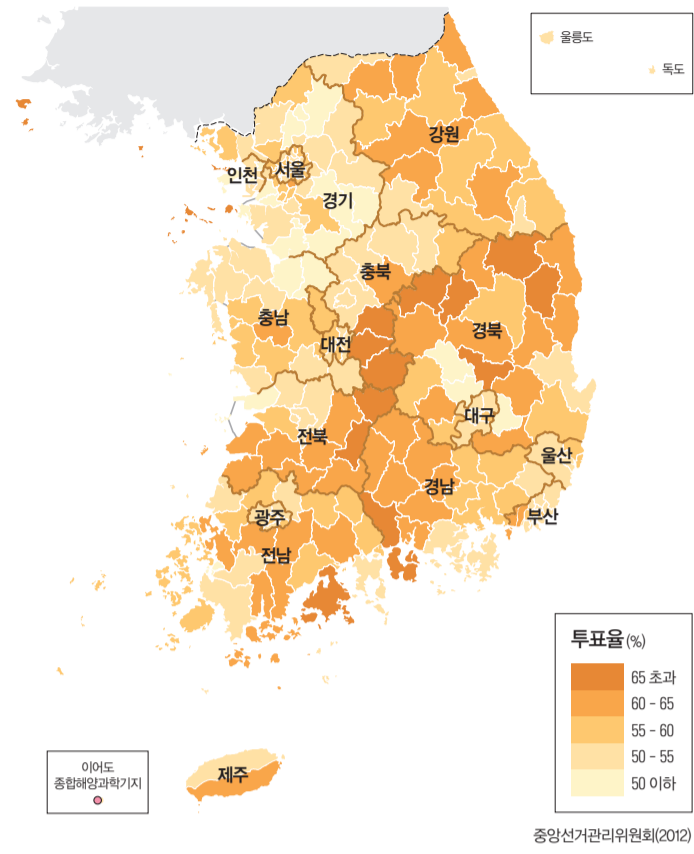


사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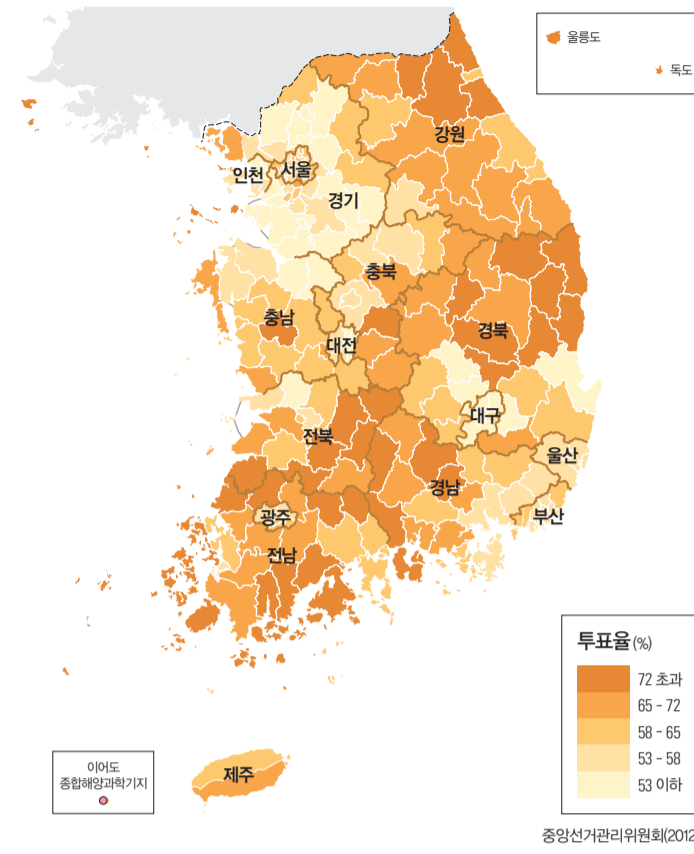
제18대 대선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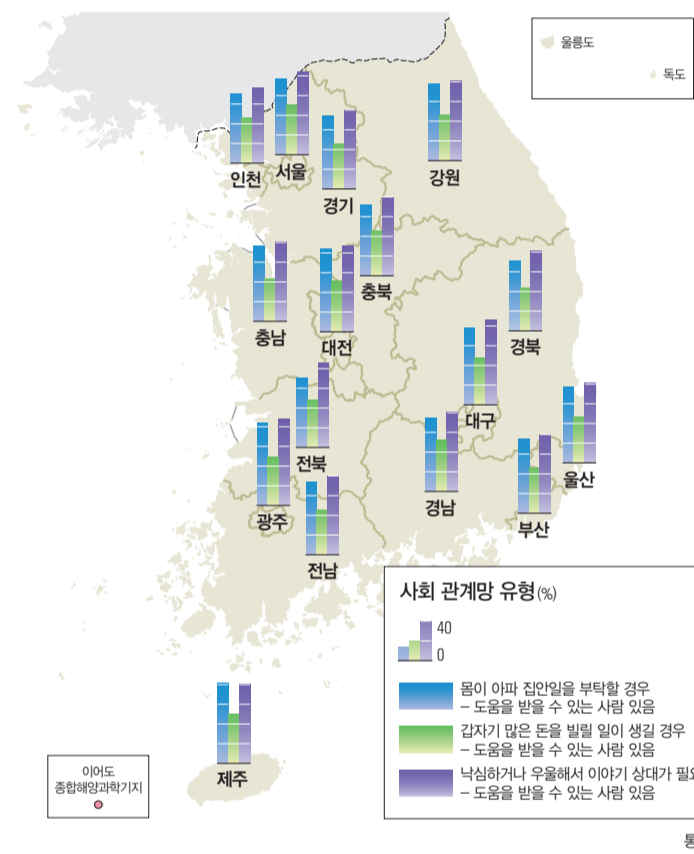
제19대 총선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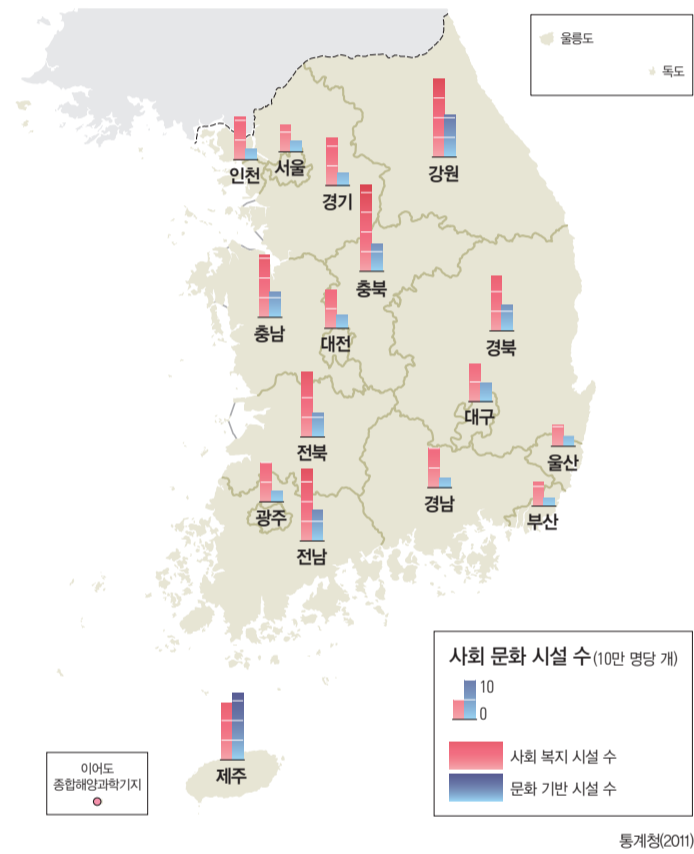
제6대 지방 선거 투표율



사회 관계망



사회 복지·문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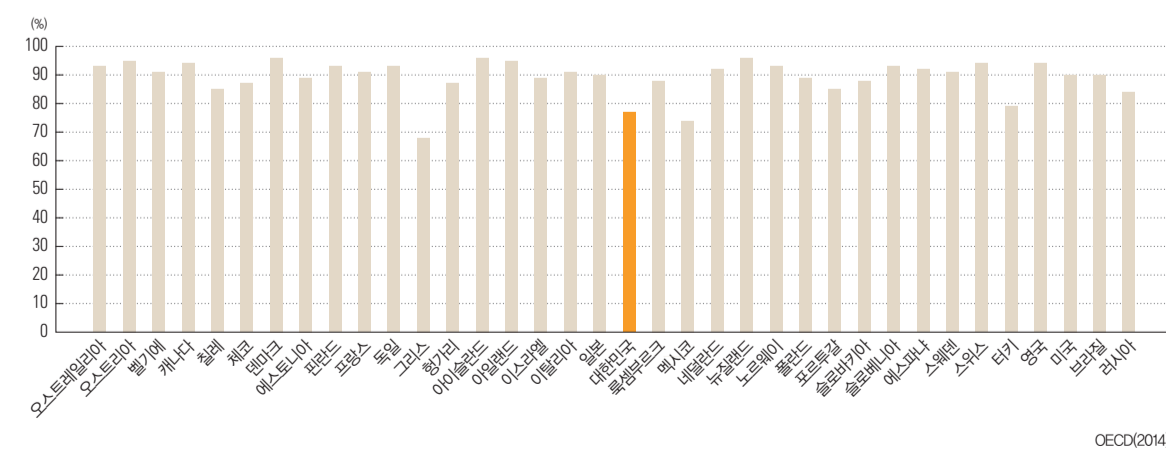


시민은 사회 참여로부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삶의 질의 현재 수준을 가능하고 앞으로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 실천을 모니터링한다. 민주주의 태생의 근원인 시민 사회의 개인과 단체의 활발한 사회 참여 전통은 사회의 소속감과 건강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사회 참여는 다양한 모습을 갖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사회 의사 결정 과정에의 참여이며, 선거와 투표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 방식이다. 높은 투표율은 시민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의 운영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집단 간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정치라 할 때, 서로 다른 집단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에서, 낮은 투표율은 그러한 이해 관계 조정이 필요 없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치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와 투표는 중앙 정부의 대통령 선거, 지방 정부의 지방 선거, 나라를 대표하는 민의 기관인 국회의원 선거 등이 있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투표율의 전반적인 경향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시민들의 정치 과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필요하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사회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개인별 사회 관계망 존재 여부와 사회 복지 시설·문화 시설 수준은 삶의 질 수준 평가에 역시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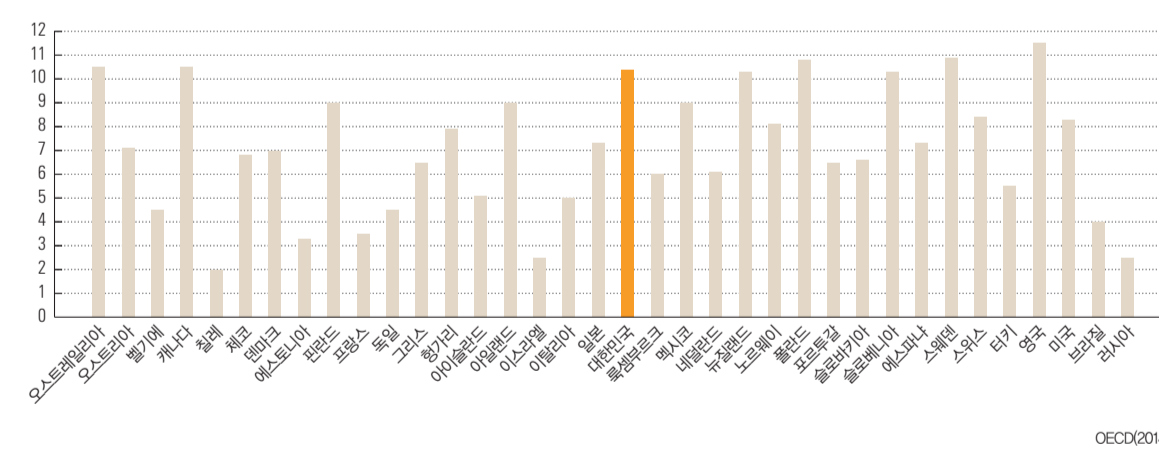
사회 관계망은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로 정의된다. 이 지표는 타인과의 접촉 빈도와 개인적 관계의 질이 행복의 중요 요소임을 나타낸다. 규칙 제정 시민 참여는 정부의 법 제정 투명성의 수준 지표로서, 법 제정 과정에서 시민의 공식적인 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지는가를 표현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회 통합과 행복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투표율은 유권자 중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이다. 높은 투표율은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와 시민의 정치 과정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이다.

OECD 통계를 보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92%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다고 한 반면, 초등교육만을 받은 사람들은 85%만이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답을 하였다. 또한 OECD 전체 국가에서 39%의 시민들이 그들의 중앙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하였다. 규칙 제정 시민 참여에 의한 정부 신뢰는 정부의 책임성, 경제 활동 효율성, 정부 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 등을 증진시킨다. 투표 참여율은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OECD 평균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투표율의 차이는 10%에 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29%에까지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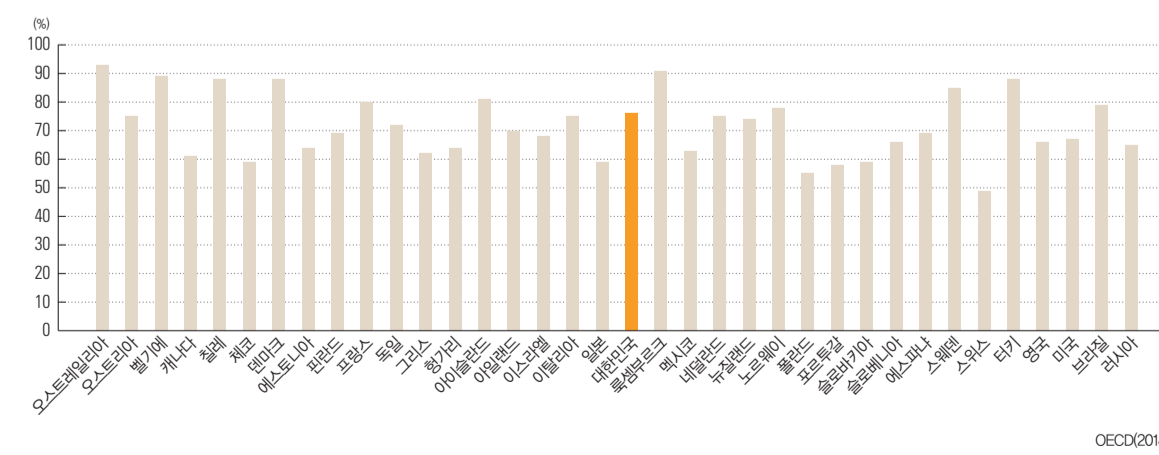
사회 관계망의 질



규칙 제정 시민 참여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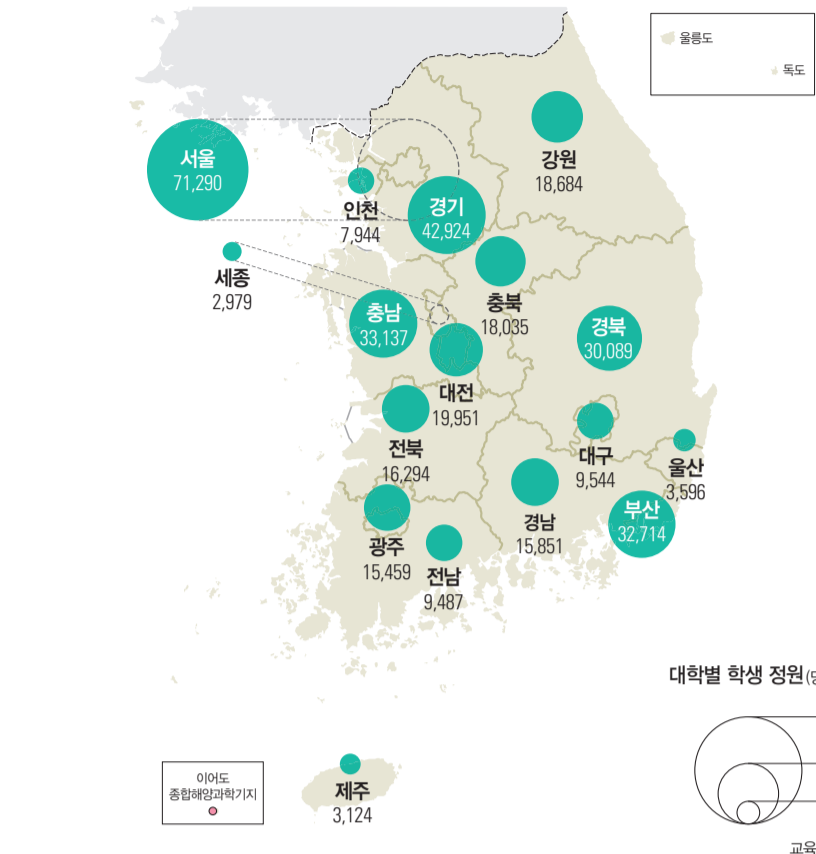


투표 참여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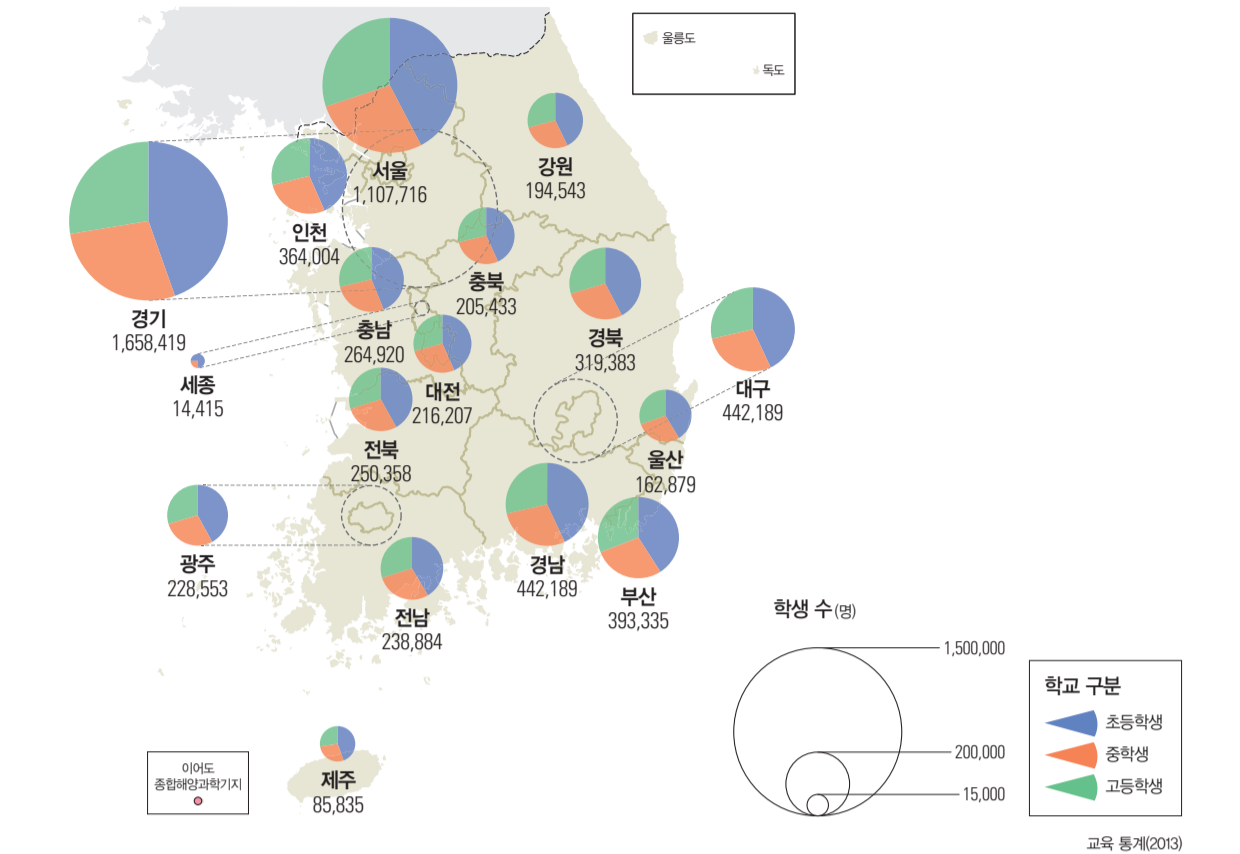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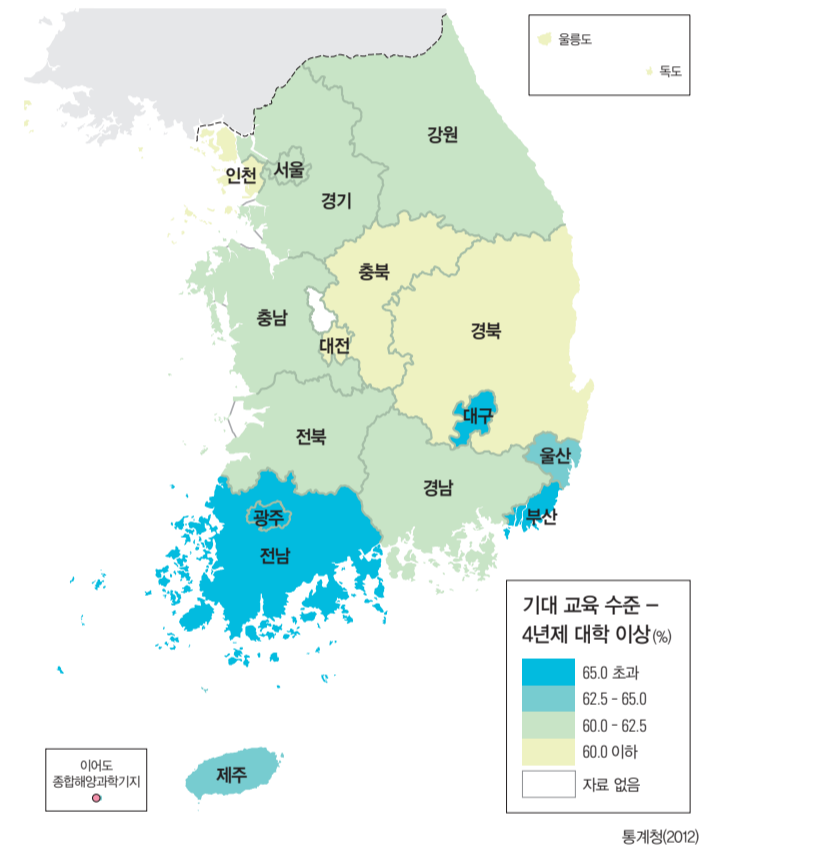
시·도별 대학 입학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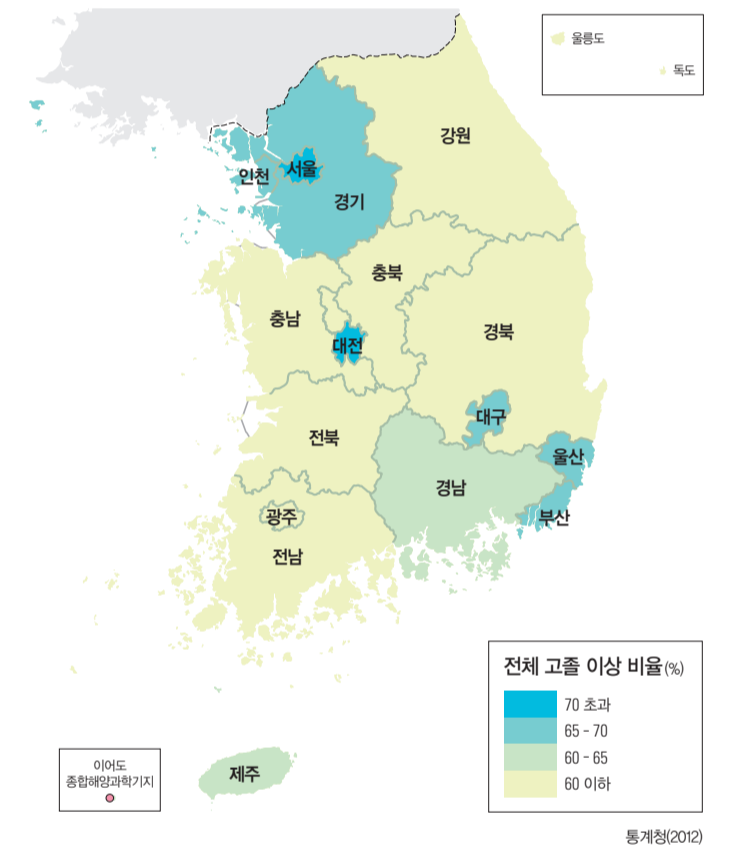
시·도별 초·중·고 재학생 수



시·도별 기대 교육 수준



시·도별 고졸 이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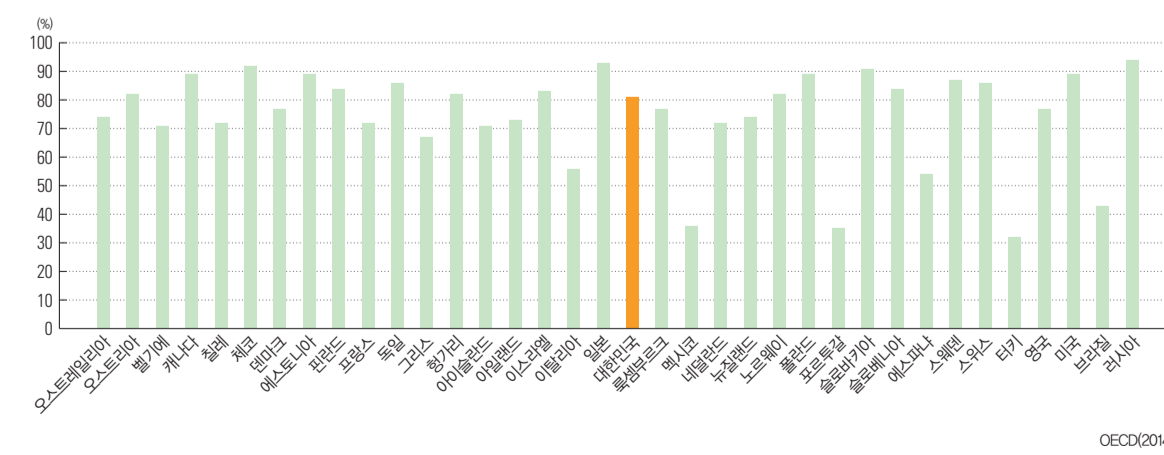


적정 수준의 교육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다. 유교 문화권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매우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었다. 광복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교육은 피교육자가 전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인격 형성을 도모하는 것과, 국가 발전과 개인의 성취를 위해 효율성 제고와 경쟁에서의 생존에 필요한 수단을 획득하는 것 등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삶의 질이 개인과 사회의 행복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교육은 그 중요한 성취 과정이라 한다면, 교육의 근본적인 역할이 어느 쪽이어야 하는가는 행복을 인격 형성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얻는 것으로 볼 것인지,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과 성취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OECD는 교육의 수월성과 함께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크게 중요시하여 교육 수준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지역별 기대 교육 수준, 기초 학력 이수 비율, 학업 성취도 등을 측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취학 인구 감소로 인해 중등 교육 기관 대비 대학 정원 과다와 구조 조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적 원리의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는 교육에서도 상호 긴장과 보완의 관계를 갖는다. 이는 국가의 연립법, 성별 인구 구조의 변화, 경제 활동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과 맞물려 교육 문제가 교육만의 영역이 아닌 사회의 모든 문제와 맞물리는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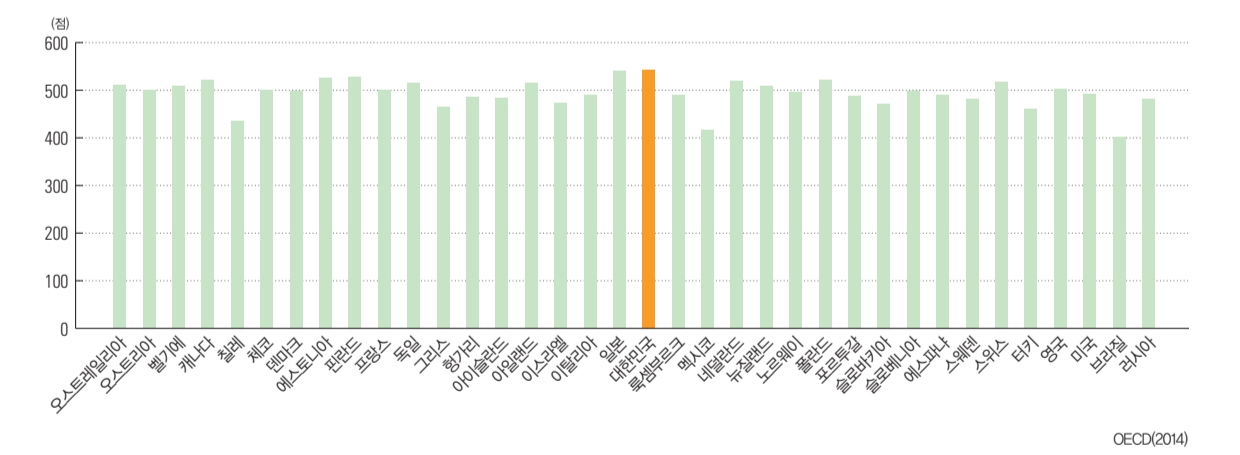
교육 기간은 5세 아동이 39세에 이르기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식적인 교육의 기간으로 측정되며, 급변하는 지식 사회에서 삶을 위한 기술을 익히는 데 그 사회에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수학 기간을 필요로 하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다. 고졸 이상 성인 비율은 2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학업 성취도는 15세 학생의 학업 수행 능력을 OECD의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에 근거하여 측정된 결과를 나타낸다. 약 15년에 달하는 의무 교육 기간의 마지막에 현대 사회에의 완

전한 참여를 위해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로서 읽기, 수학, 과학 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한다. OECD 평균으로 고졸 이상 성인 비율은 75%이며, 이 비율은 OECD 안에서도 국가 간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다. OECD 전체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83%가 직업을 갖고 있으나, 중등 교육만을 받은 사람들은 직업을 가진 비율이 55%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학업 수행 능력 PISA 지수는 542점으로 OECD 1위이며 평균인 497점에 비해 크게 높고, 최저점 국가에 비해 140점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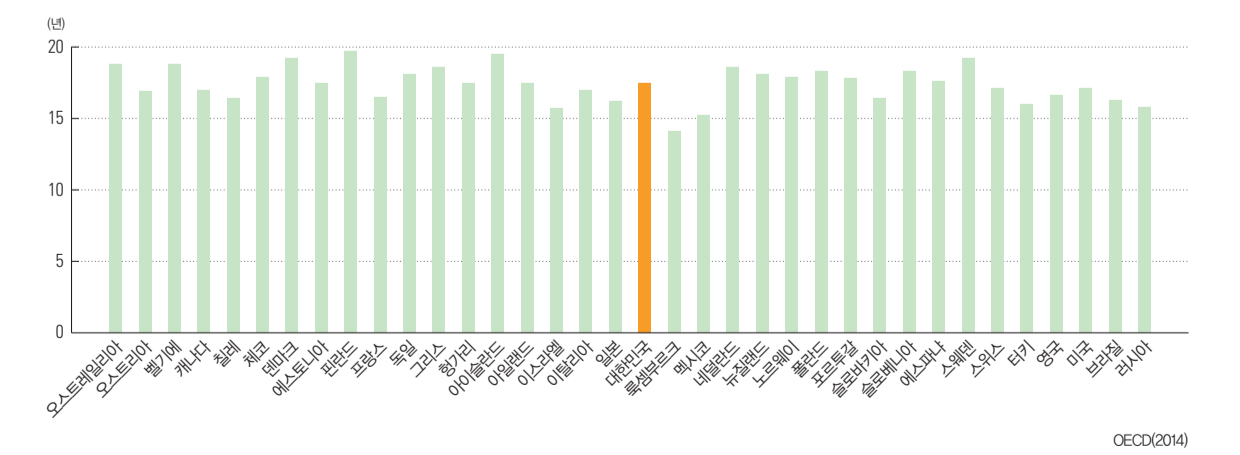
고졸 이상 성인 비율



독해, 수학, 과학에 대한 PISA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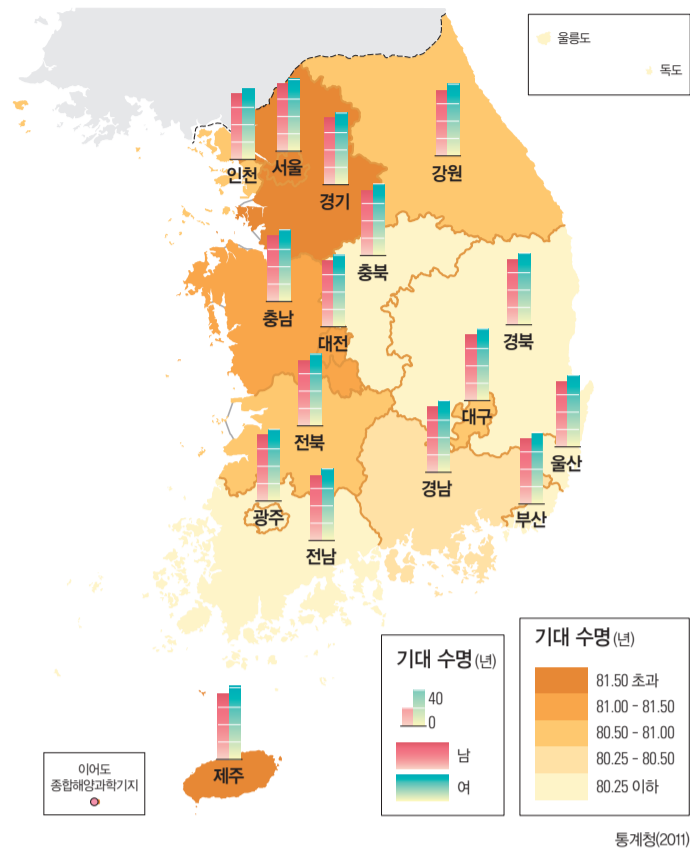
교육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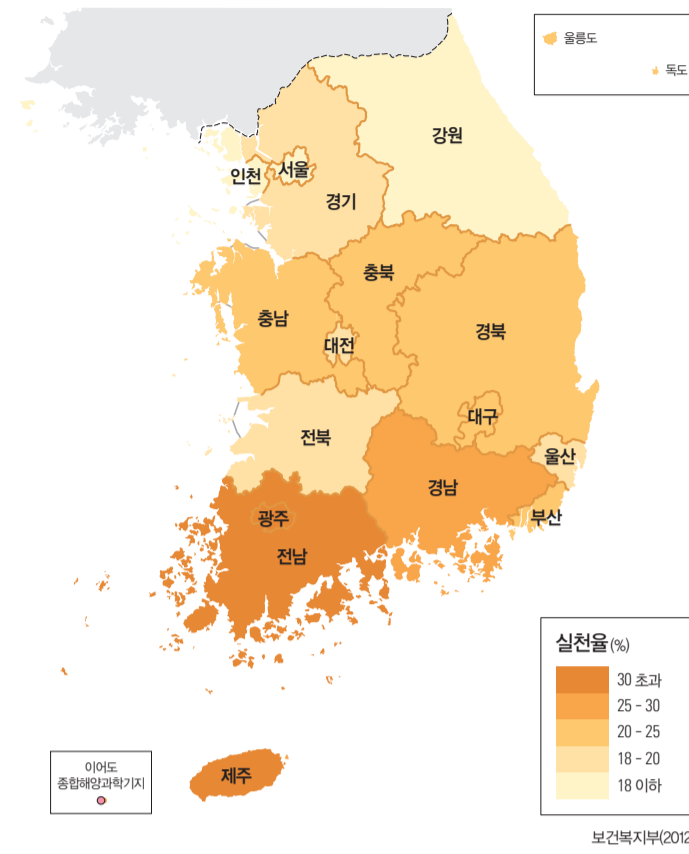


건강과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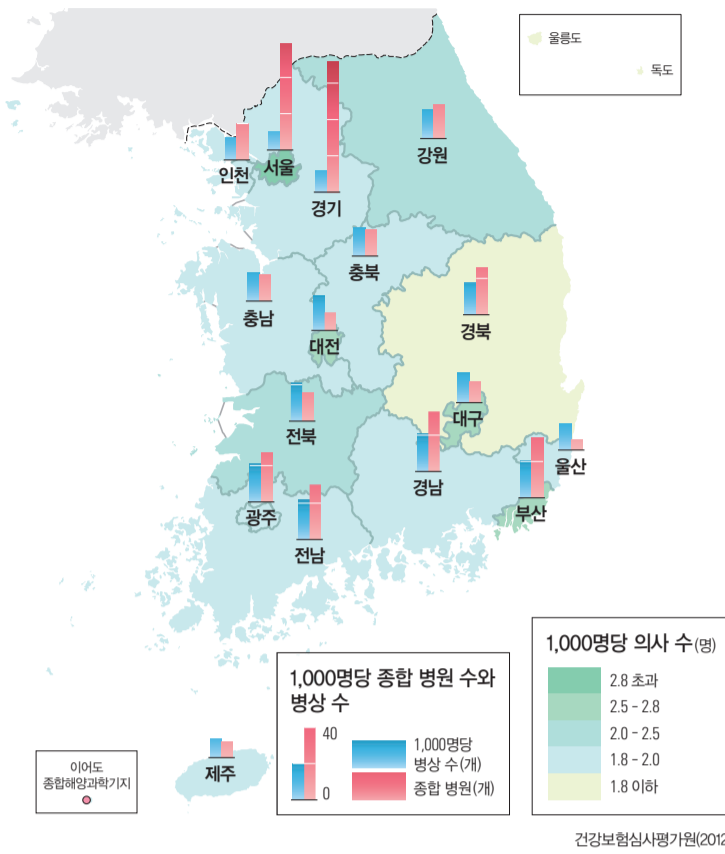
기대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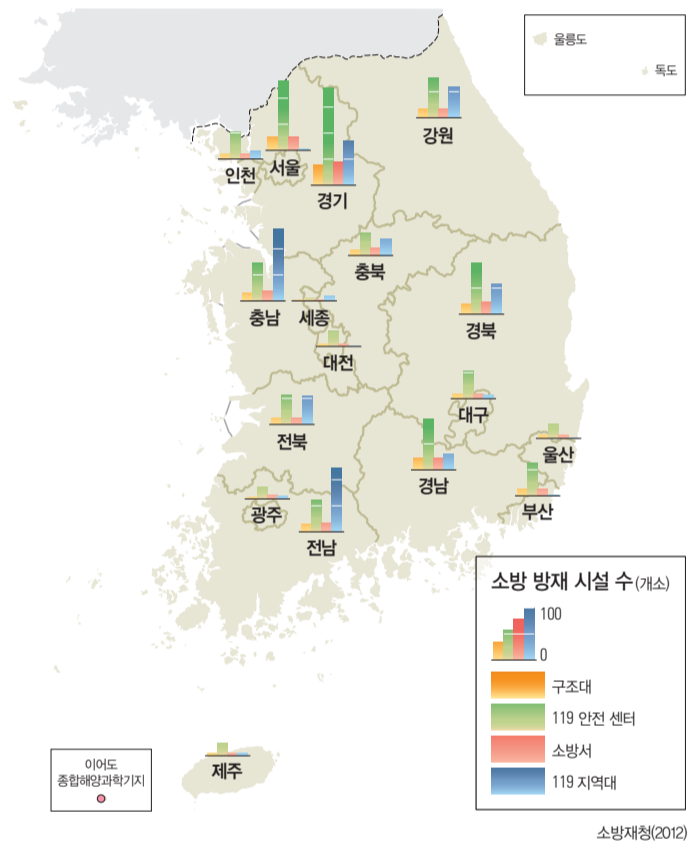
신체 활동 실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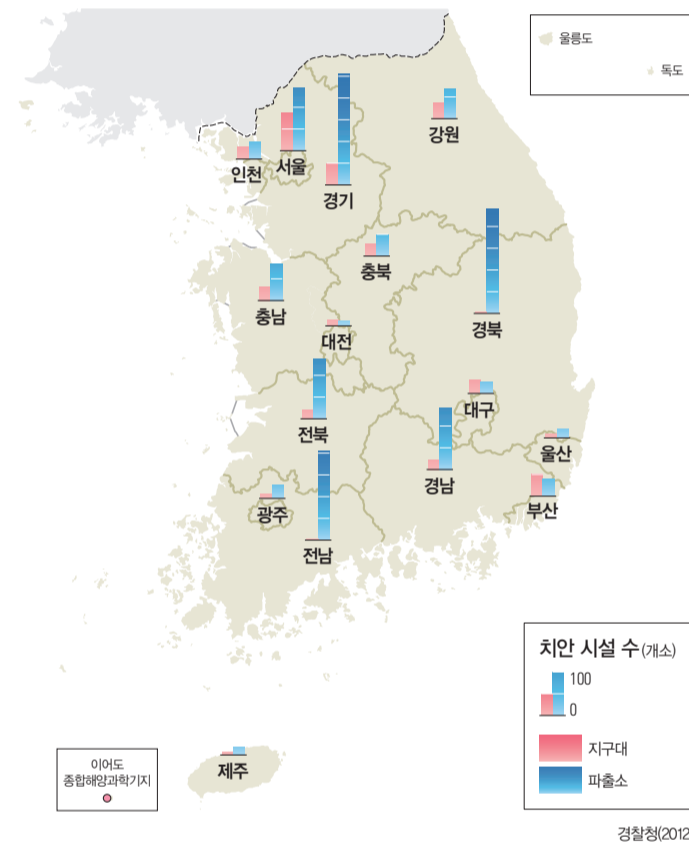
종합 병원 수 및 1,000명당 병상 수와 의사 수



소방 방재 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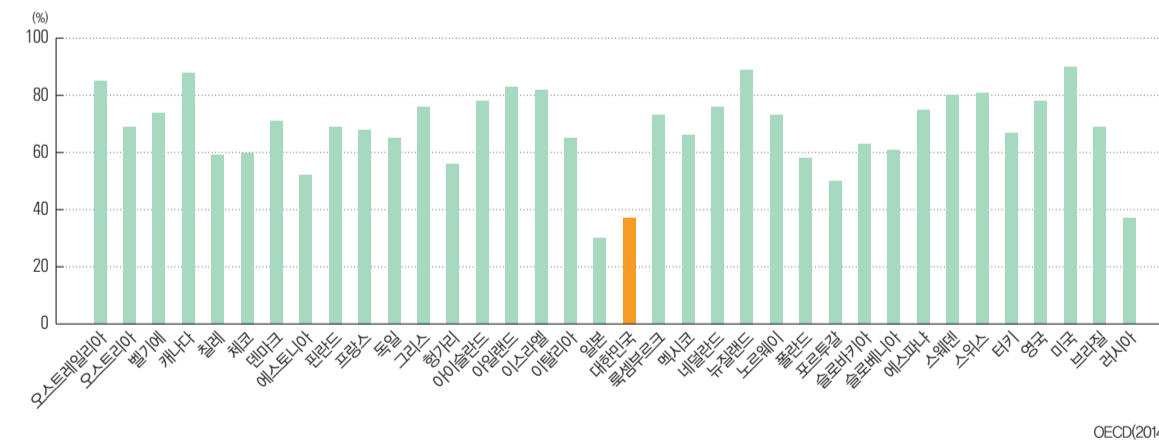
치안 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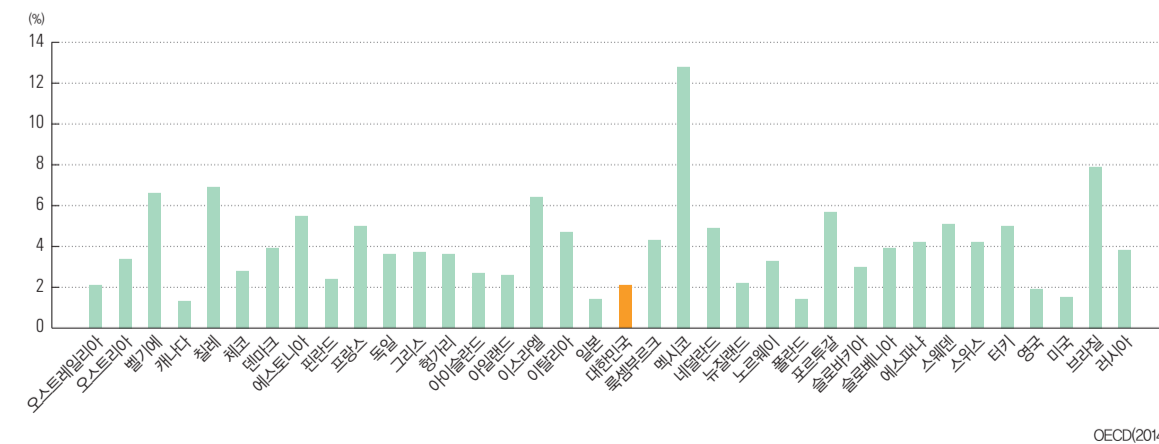
기대 수명은 신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해수를 나타낸다. 기대 수명은 OECD 국가 전체로 지난 50년 간 엄청난 증가를 기록하였다. 기대 수명은 가장 널리 쓰이는 건강의 척도이나, 삶의 길이는 측정하지만 삶의 질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자기 보고 건강 상태는 자기 스스로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건강을 평가하는 것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일견 주관적으로 보이는 '당신의 건강은 어떠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그 사회의 미래 건강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범죄 피해

경험은 지난 해 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다. 범죄의 피해는 피해에 의한 직접적인 고통 외에 그로 인한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다. OECD 평균으로 기대 수명은 80세인데, 이는 1960년에 비해 10년이 증가한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전체에서 약 69%의 성인이 스스로 건강하다는 답을 하고 있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상위 20%는 80%가, 하위 20%는 61%만이 건강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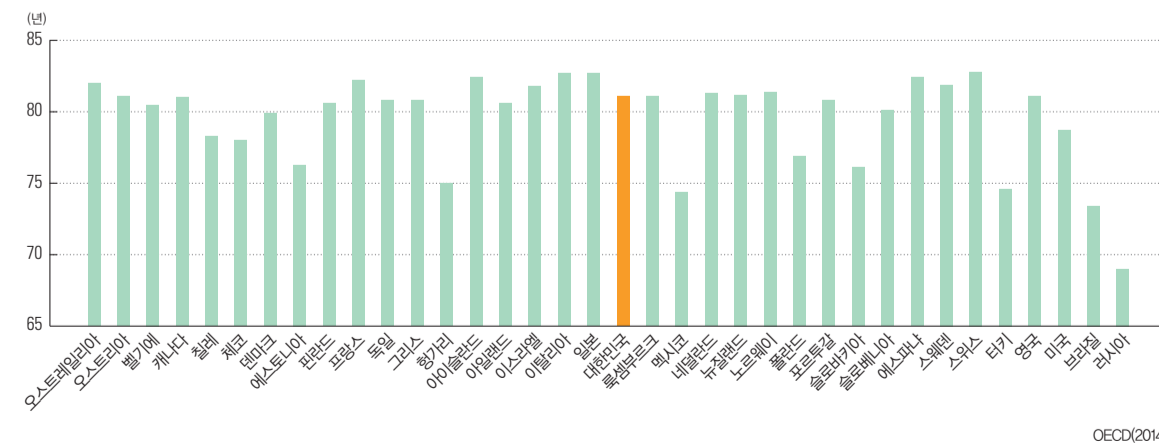
자기 보고 건강 상태



범죄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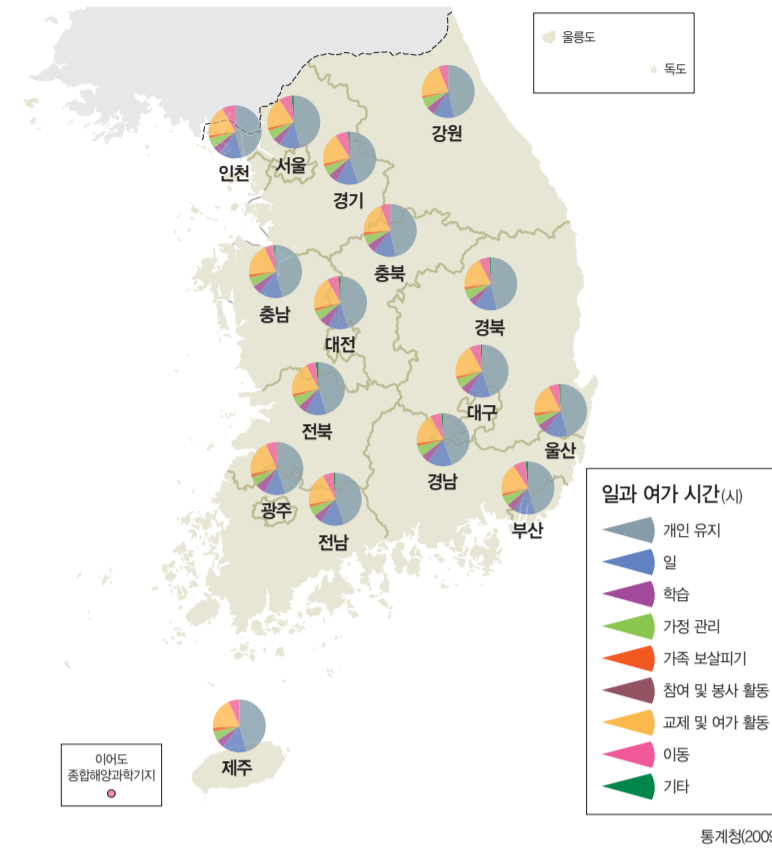
기대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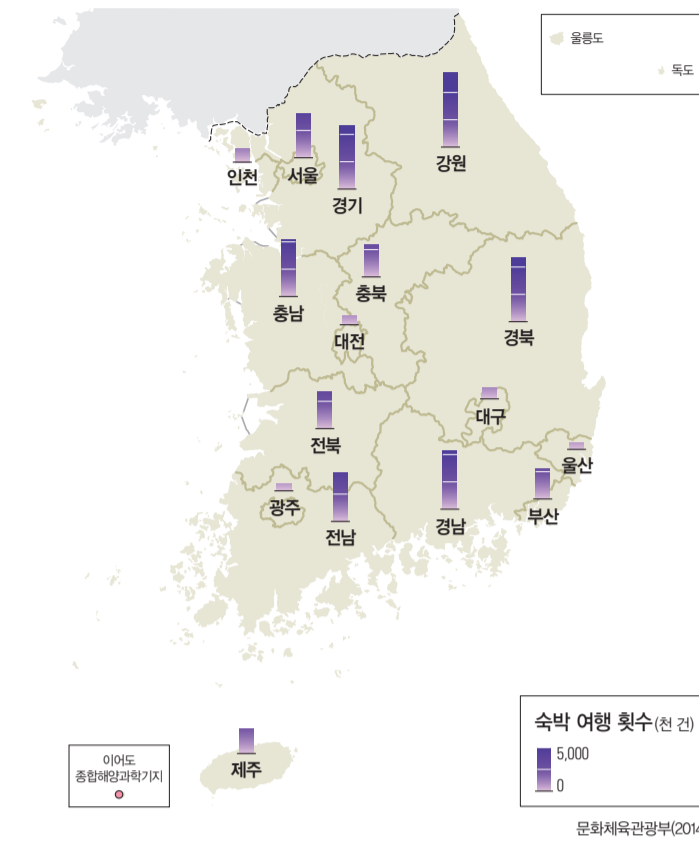
안전한 사회, 시민 개개인이 건강 문제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사회 실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건강 수준의 대표적인 측정 지표인 기대 수명은 수도권과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수도권은 더 나은 의료 인프라가, 제주는 더 나은 자연 및 생활 환경이 그 이유인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광역시·도 내의 시·군·구별 편차도 상당히 존재한다. 2011년 남녀별 기대 수명의 차이는 7세로 상당한 정도인데, 절대적인 기대 수명의 차이가 더불어, 노인 인구의 건강 상태 역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사안이다. 지역별 소방서와 파출소의 분포는 해당 지역의 범죄 및 사고 대처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안전 관련 지표이다. 이러한 안전 관련 중추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범죄나 사고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지역 특수성에 기초한 지방 분할적 직제안과 전국 통일의 신속성과 관련 집중에 기초한 중앙 집권적 직제안 간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OECD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가 범죄 피해를 받을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소득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평상시 안전하다는 생각, 범죄로부터의 위험이 적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범죄와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과 건강을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만 맡긴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 정부의 체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삶의 만족도와 일, 여가의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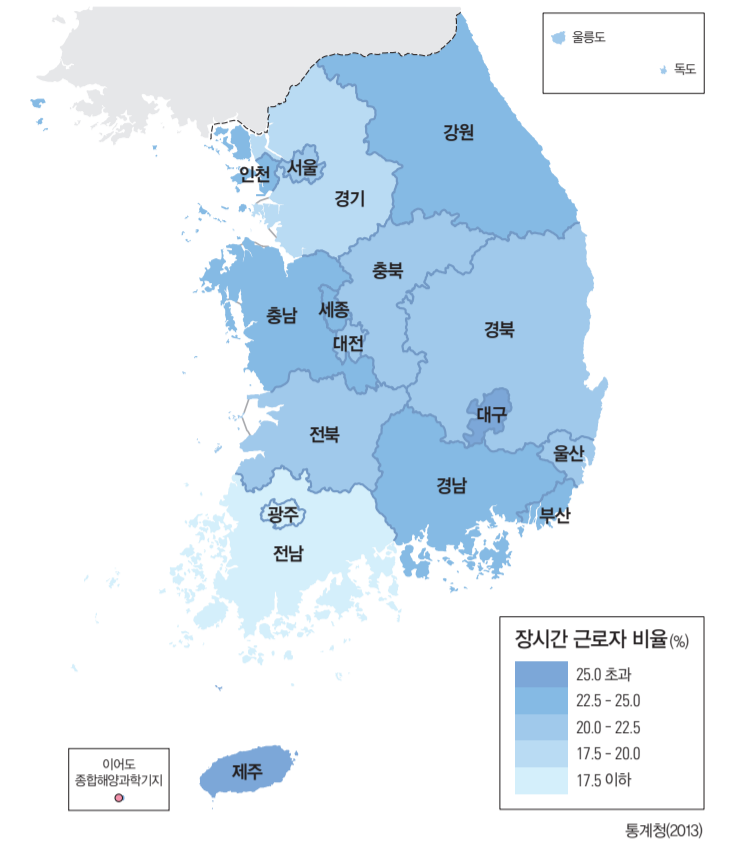
일과 여가 시간 사용(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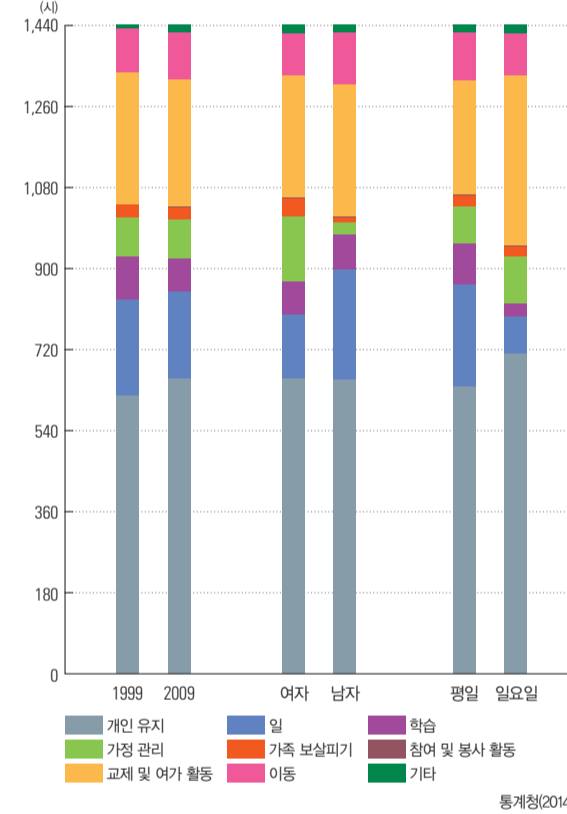
여행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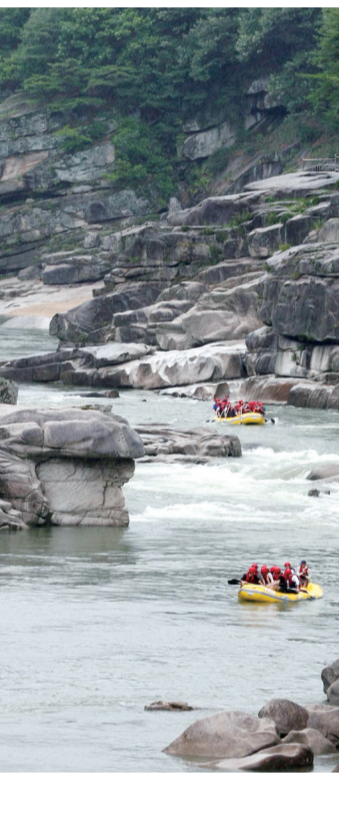
장시간 근로자 비율



여가 시간의 활용(연도별, 성별, 요일별)



피서철의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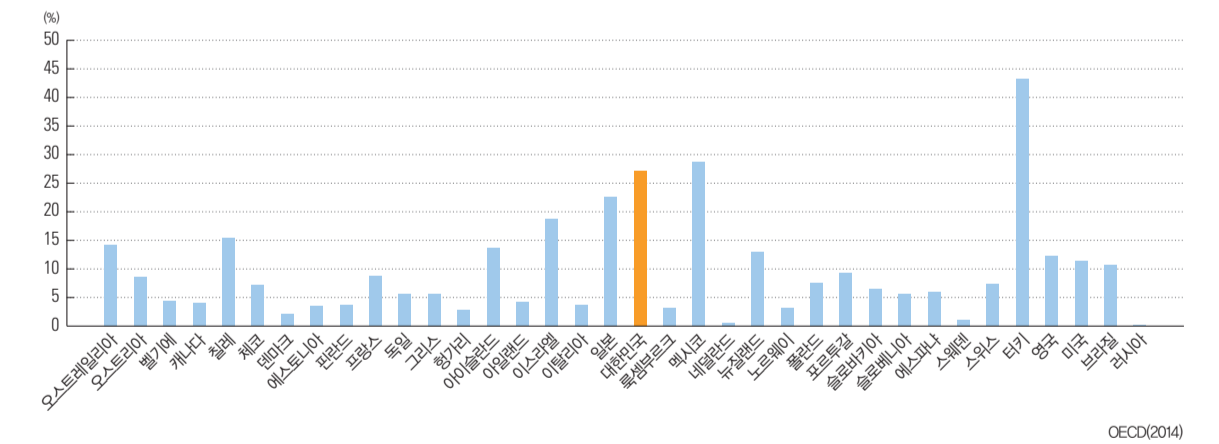
피서철의 바다

하루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만일 근로 시간이 매우 길어지게 되면, 이로 인한 직접적인 삶의 질 저하 문제뿐 아니라 근로 외 기타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의 활동 제약은 지역 간 혹은 개인이나 인구 집단 간 삶의 질 차이를 발생시켜 사회적 배제나 사회 정의의 문제로까지 진전될 수 있다. 시간 이용과 삶의 질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는 활동인데, 이상의 이유로 활동 참여에의 접근성이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하루 일과는 매우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 중 수면이나 일 등 고정된 시간 사용이 필요한 활동들을 제외하고는 그때 그때 개인의 의사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임의 활동 시간을 자유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삶의 질의 수준과 직접 관련되는 이들 활동에 드는 시간은 활동 참여 기회의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생활 방식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계청은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생활 시간 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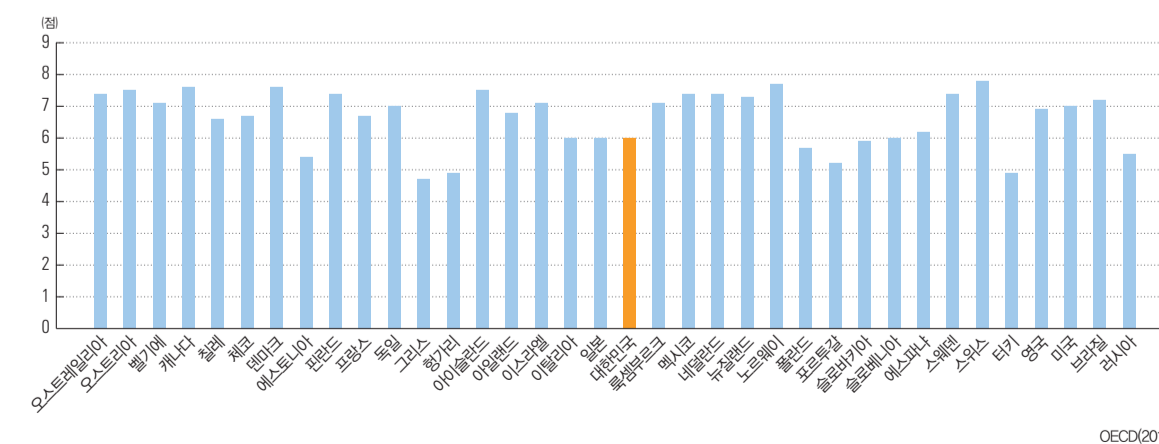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의 주관적 척도로서, 사람들이 현재 그들의 느낌보다는 이제까지 살아 온 전체로서의 그들 삶을 평가한 척도이다. 삶의 환경과 주변 여건 등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반영한다. 여가와 개인 활동에 쓴 시간은 24시간 중 수면, 식사, 레저, 개인 용무 등에 쓴 시간을 본 단위로 측정할 것을 의미한다. 여가 시간의 양과 질은 사람들의 전반적인 행복 추구에 중요하며 이 시간의 증가는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장시간 근로는 1주 평균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지나치게 긴

근무 시간은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연평균 근로 시간이 멕시코에 이어 OECD 2위인, 2,163시간이며, 최하위 국가인 네덜란드 1,380시간의 1.6배에 달한다. 장시간 노동자 비율은 터키와 멕시코에 이은 3위로 27.1%를 기록한다. 일과 여가의 균형은 다양한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에게 있어 바람직한 것이며, 경제적 효율성을 보더라도 단위 시간당 노동 생산성 및 일에 대한 집중도 등에서 더욱 개선할 여지가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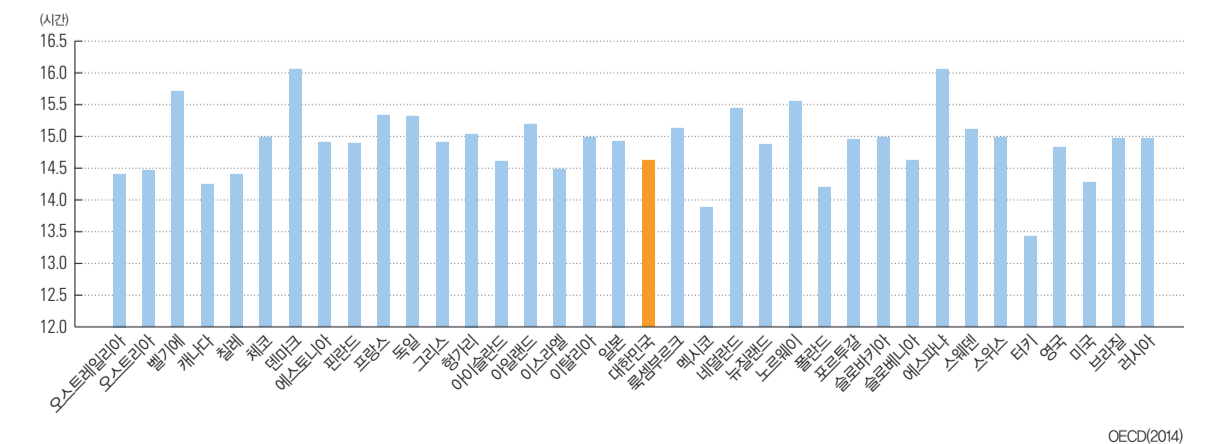
장시간 근로자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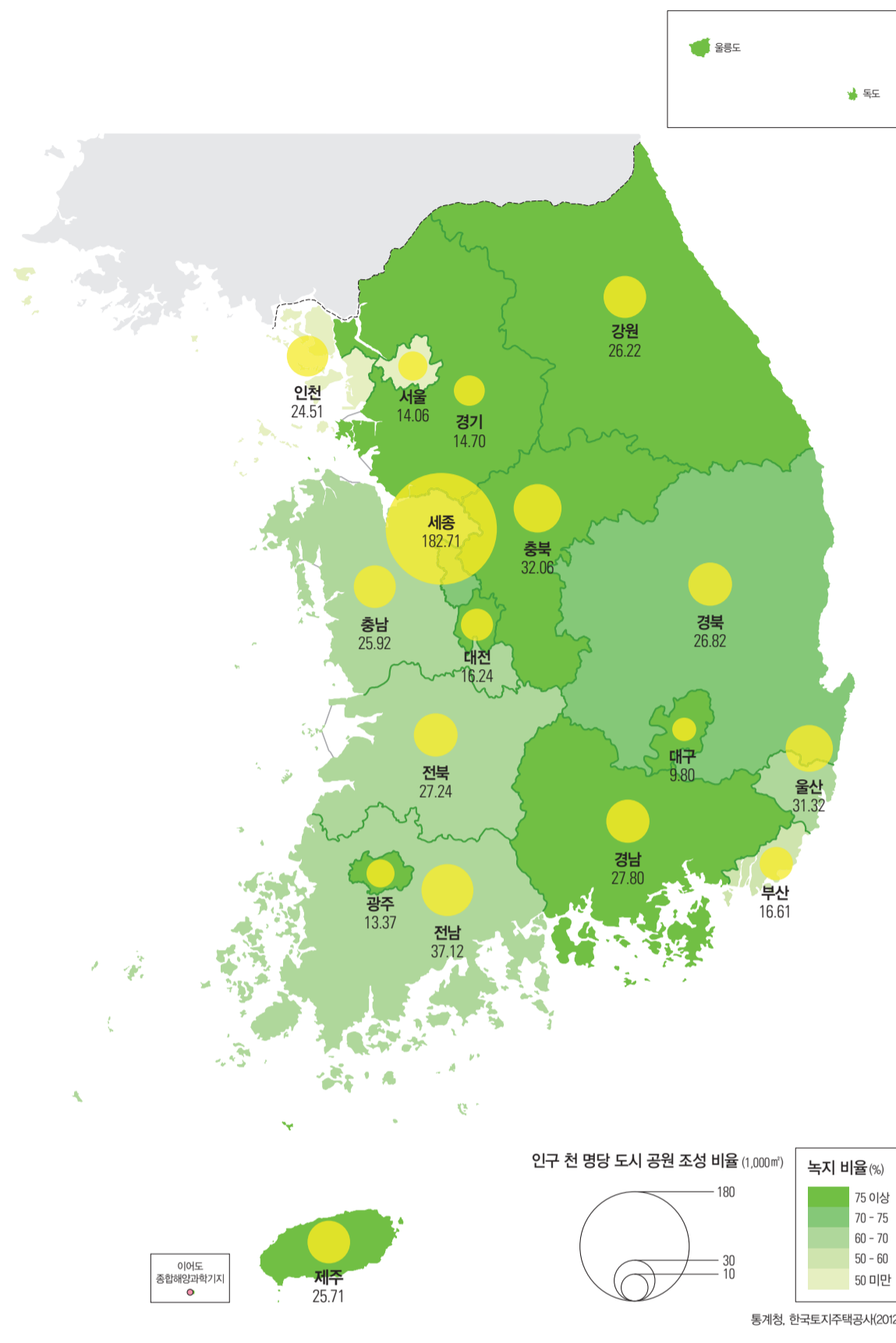
여가와 개인 활동에 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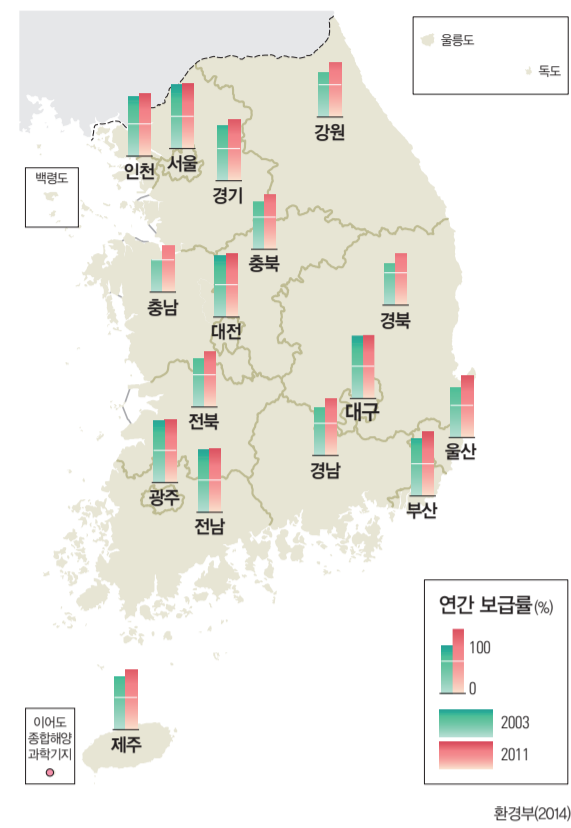


생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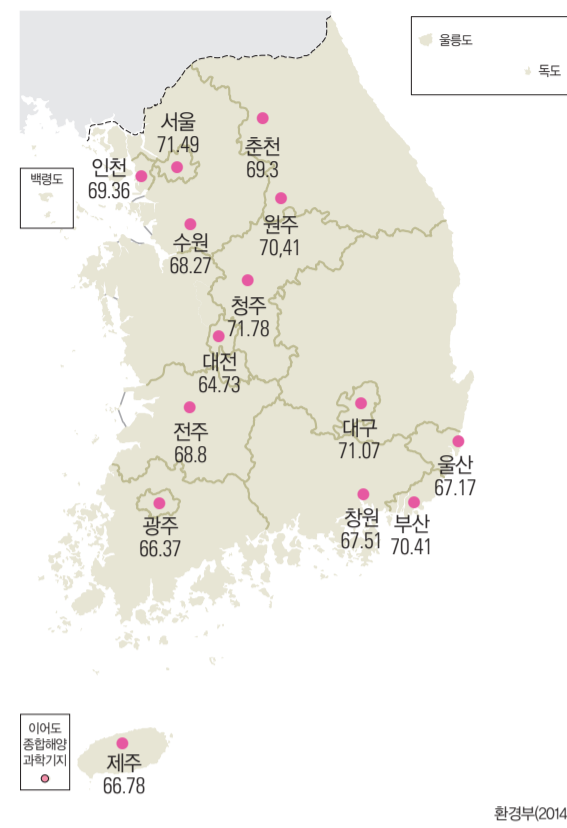
녹지와 도시 공원 비율



상하수도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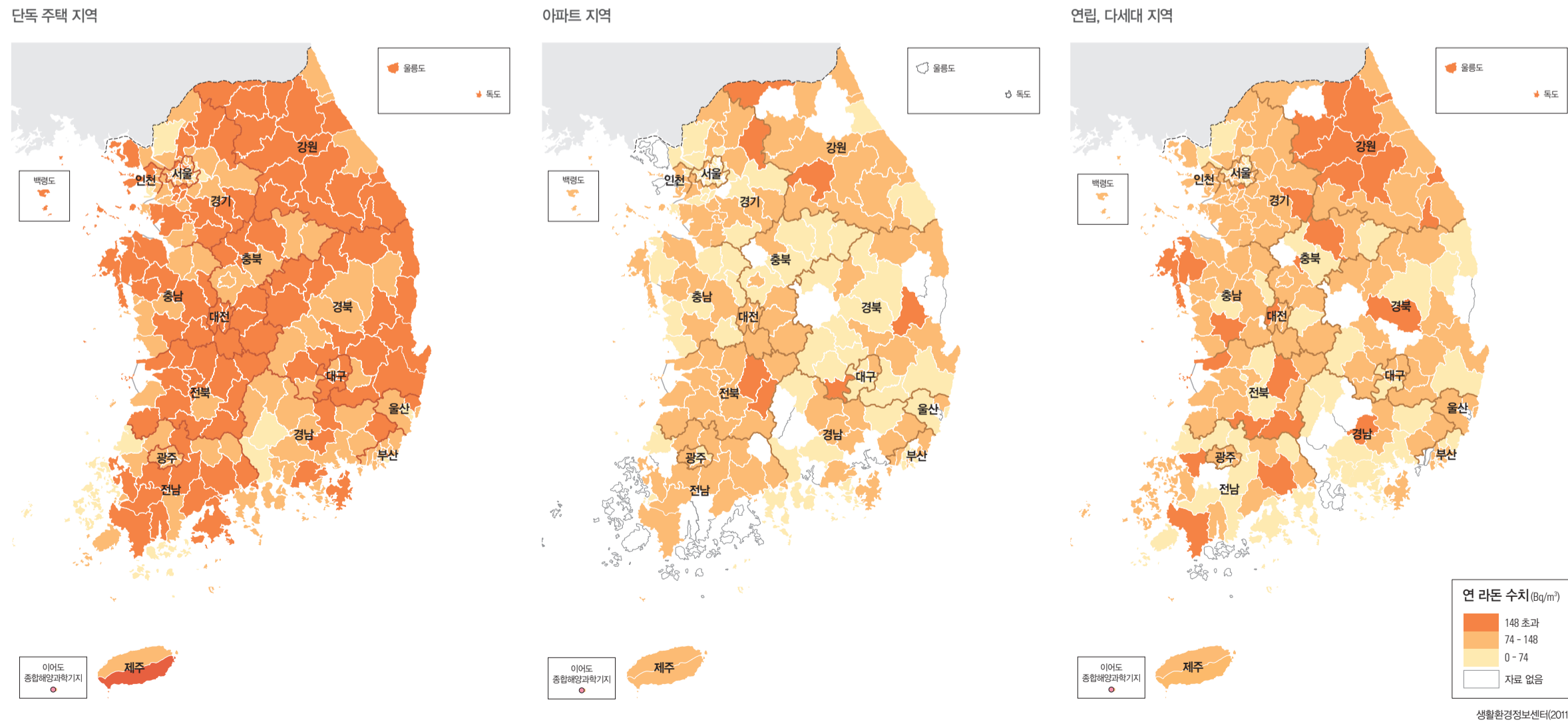
환경 소음(dB)



삶의 질 관련 생활 환경 수준은 녹지, 공원 등 생활 편의 시설과 상하수도 보급 등 삶의 편리성 제고에 관한 요소와 소음이나 방사능 위험 등 위험 및 위기 관리에 대한 요소로 살펴볼 수 있다. 인구 대비 도시 공원 면적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인 세종시가 다른 광역 시·도보다 압도적으로 넓다. 광역 시·도별 녹지 비율은 산지가 많은 강원, 경기, 충북, 경남 등이 높는데, 산지의 국지적 분포에 따라 실제로 시·군·구별 녹지 비율은 매우 다르다.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이지만 상하수도 보급률은 높은 편이다. 환경 소음은 대도시일수록, 근처에 공항 등의 대형 소음 유발 시설이 있을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라돈은 지각의 암석 중에 들어 있는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 방사능 물질이다. 주로 공공 장소와 공공 시설에서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법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건축 자체의 방사능 포함 등을 이유로 개인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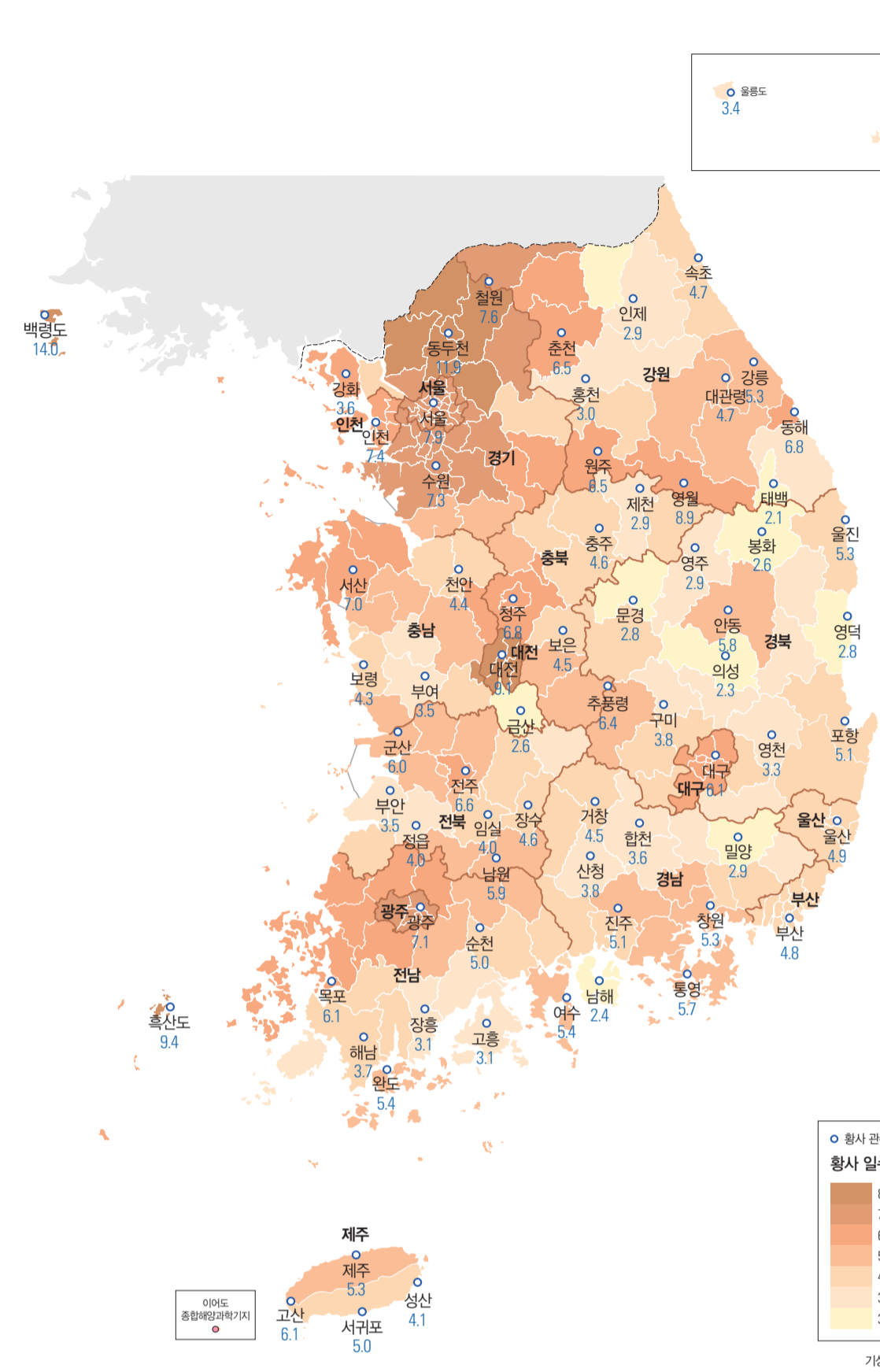
과 공동 주택 등의 방사능 과다 여부를 검사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람이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의 85%는 자연 방사선에 의한 것이고, 라돈에 의한 방사선은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의 약 43%이다. 1초 동안 하나의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는 양을 나타내는 라돈 농도는 방사성 물질의 국제 표준 단위인 베크렐(Bq)로 표현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라돈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다중 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 다중 이용 시설의 라돈 고기 기준을 148Bq/m³ 이하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준을 개인 주택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해마다 전국 실내 라돈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 라돈 저감 정책을 마련하는데 쓰인다. 현재 수집한 라돈 정보에 의해 전국 실내 라돈 지도가 작성되어 인터넷에 공개되며, 라돈 저감 시범 사업 및 라돈 관리·저감 설명서가 제공되고 있다.

라돈의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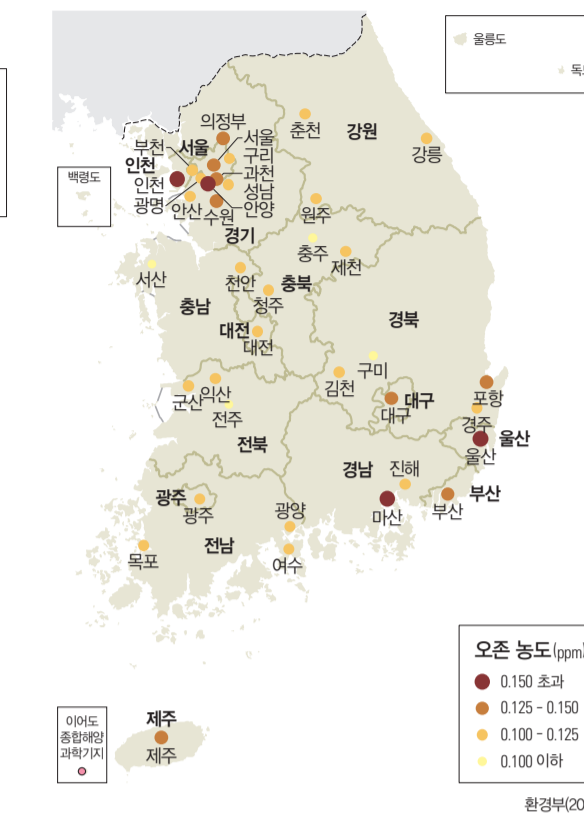


환경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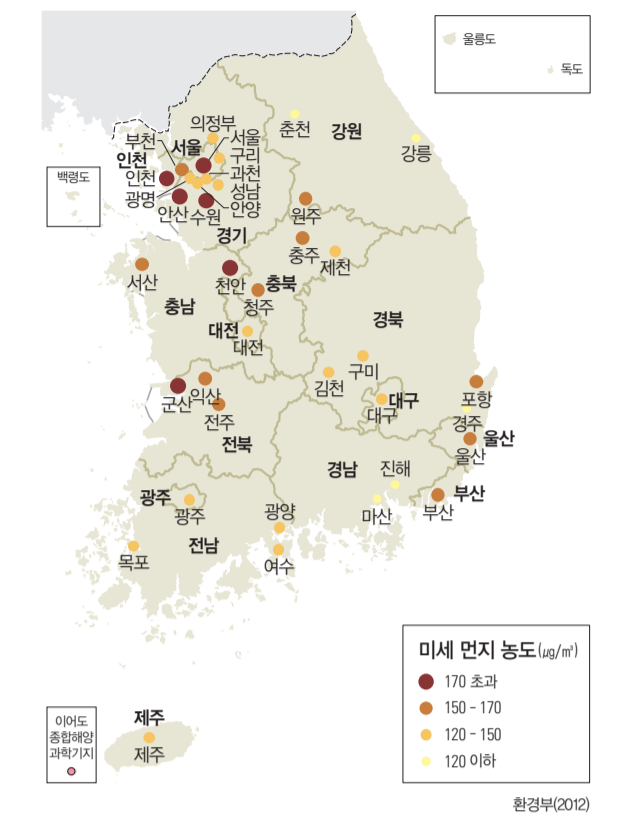
황사 관측 지점 및 황사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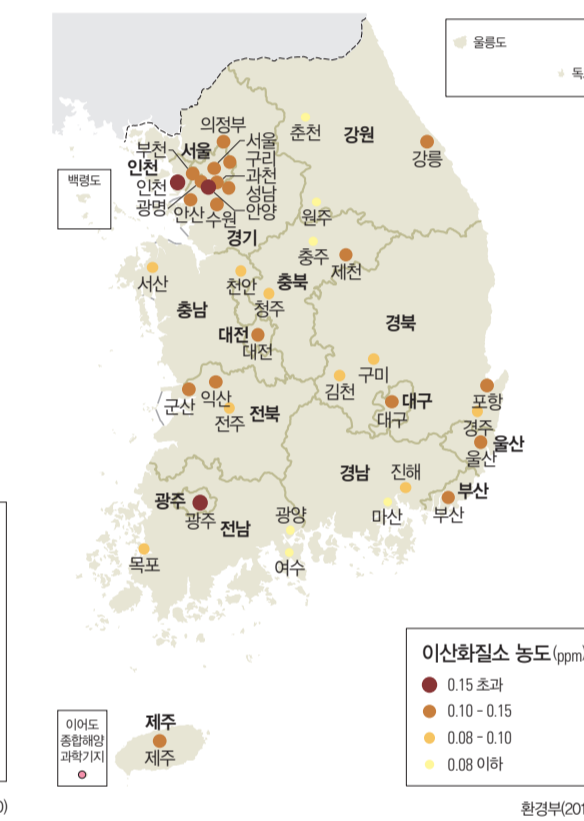
주요 도시별 오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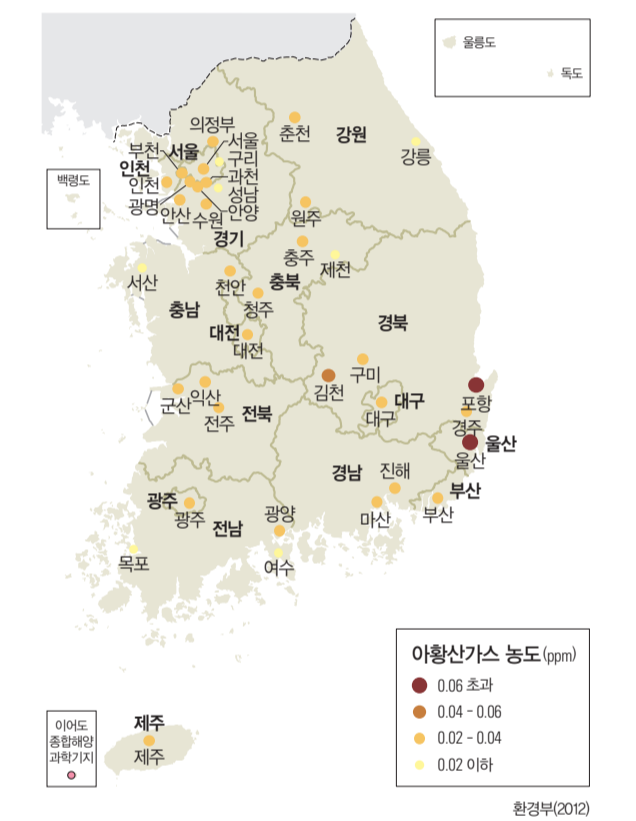
주요 도시별 미세 먼지



주요 도시별 이산화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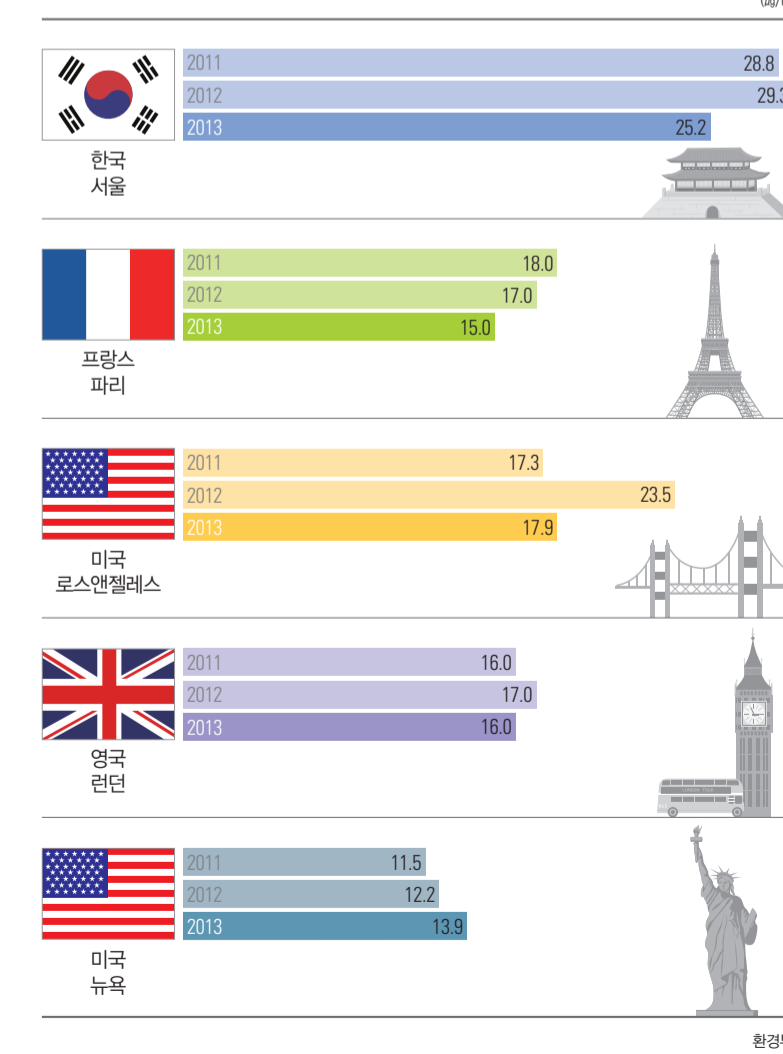


주요 도시별 이황산가스



황사, 미세 먼지, 오존은 과다할 때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 영향권 내에서 특정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대규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인지되고 있다. 황사, 미세 먼지, 오존은 다른 환경 오염과 달리,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경을 넘어오는 오염 전파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염 발생원의 근본적인 제거와 지속적인 관리에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황사와 미세 먼지를 과다 침적하거나 오존에 과다 노출 시 인체는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PM 2.5는 입자의 크기가 2.5µm 이하인 초미세 먼지를 뜻한다. 서울은 2013년 현재 초미세 먼지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세계의 주요 도시들에 비해 아직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 이의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이고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황산가스(SO₂)는 화석 연료에 의한 금속 제련, 석유 화학 제품 생산 과정 등에서 발생하며, 과다 노출 시 인체의 점막을 자극하고 호흡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아황산가스(SO₂)는 미세 먼지(PM 10)의 주요 원인 물질이기도 하다. 이산화질소(NO)는 자동차, 발전 등 고온의 연소나 화학 물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며,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계통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연안 수질은 연근해 어업의 건강성 및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안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수온, 염분, 수소 이온 농도, 용존 산소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총질소, 총인, 부유 물질, 투명도 등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인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유기물 등의 오염 물질을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mg/L)이다. 오염도가 높을수록 유기물이 많아 산화 분해를 위한 산소 요구량 역시 높아진다. 동해안은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서해안은 시화호 수질 개선 등으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세계 주요 도시 PM 2.5 연평균 농도



연안 수질

